

“U대회 경기장 잡음 소통부재 아닌가”

광주시의회 임시회, 공기업 임원·측근 인사 놓고 공방도

강시장 “수영장 부지 예산문제로 재검토 불가피했다”

광주시의회는 28일 열린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민선 5기 광주시의 소통부재와 시스템 행정, 공기업 임원 인사 문제 등을 질타했다. 이에 강운태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적극 해명하면서 한때 공방이 일었다.

광주시의회 김보현(민주·서구 2)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민선 5기 시정의 핵심 비전으로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건설’을 주창했으나, 불행하게도 오늘의 광주시장은 소통부재와 시스템 행정의 붕괴를 지적하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대표적 사례로 U대회 경기장 입지선정과 RDF 사업 진행과정을 꼽았다.

김 의원은 또 “LED 사업과 전기차 동차, 터치스크린 기술, 3D 관련 사업, 투광기 미국 진출사업 등 5개 역점사업 분야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패사례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이 없다”고 밝혔다.

불성실 국장 답변… 광주시의회 파행

“그럼 질문하지 마시라” 논란… 강 시장 사과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간부의 시정질의 답변태도를 문제 삼아 강운태 광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28일 본회의를 연기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를 통해 시정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전날 신광조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면서 1시간 넘게 회의를 열지 못했다.

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간 담화를 하고 전날 신 국장이 시정 질의 답변에서 상승적 표현으로 본질을 피해거나 의원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를 한데 대해 문제를 삼고 강운태 광주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윤봉근 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간 담화 후 본회의 발언을 통해 “어제 신 국장의 답변 태도와 발언 내용은 저급하기 짙어 없었다”며 “이는 시의회와 시민을 모독한 것으로 오히려 본회의에서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

다.

김 의원은 “이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과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속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공적 라인이 아닌 사적 인맥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별도의 투자유치나 해외진출관련 자문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시정 질의를 오후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 나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디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강 시장은 “신광조 국장의 답변과정에서 일부 답변이 부적절했고, 자료제출에 관한 혈도도 적절하지 못했다”며 “시장으로서 엄히 주의를 줬고 국장 본인도 답변과정이나 내용이 적절치 못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고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열린 1차 시정 질의에서 조호권(민주·북구 5) 시의원과 신광조 국장이 폐기물 고형 연료화(RDF) 사업과 관련된 답변 태도를 놓고 고성이나 오가는 등 마찰을 빚었다. 조 의원은 답변서의 상승적 용

어나 논리전개 방식을 일일이 거론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광주시 국장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국장은 “답변하는 간부에 따라 표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다양한 수사를 사용하는 영국의회의 모습을 보면 부럽기까지 하다. (고령연료가 문제가 있다면) 아예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본질과 동떨어진 답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조 의원이 “이런 식이라면 국장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밝언하자 신국장은 “그럼 질문을 하지 말아야죠”라고 맞받아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일부 국장의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와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이 의원들의 신경을 거슬러 수 있다”며 시정 질의 답변과정에서 간부들의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당은 “민주당은 예산문제로 재검토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홍인화(민주·북구 4) 시의원은 “광주시 공기업의 부적격한 인사는 정책 실패와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절실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으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이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이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이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이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이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이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이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이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이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이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이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이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이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이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이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이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이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이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이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

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다”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이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탐험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경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